

# 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 출범

### 도·전주·익산·완주·고창 참여...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지역 간 협력해 다양한 사업 추진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주, 익산, 완주, 고창과 함께 '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JCCP)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은 전북의 문화적 자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19일 우석대 문화관 아트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주시장, 익산시장, 완주군수, 고창군수,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도시의 협력을 통해 문화 생태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9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아트홀에서 열린 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화 자산과 특색을 알리고, 전북 전역에 문화적 시너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의 한국적 미래문화, 익산의 역사문화, 완주의 공릉문화, 고창의 치유문화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도시의 고유한 강점을 살리고, 지역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전북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전북 내 다른 지역으로도 협력을 확대하고, 전국 및 해외의 문화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국내외 문화도시와의 교류가 필수"라며, "JCCP가 전북의 문화적 자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BGF리테일에 감사패 전달

### 전북 농특산물 2600톤 공급 성과... 판로 확대 기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한 (주)BGF리테일에 감사패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 생산자 단체인 서재필 고창항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BGF리테일 간의 협력 관계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감사패를 전했다.

(주)BGF리테일은 지난 1990년 웨미리미트 개점으로 시작으로 2012년 CU브랜드를 런칭하고, 대한민국 최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종합유통서비스 기업이다. 국내 편의점 점포수 1위(23년 기준, 17,762개) 및 해외에서도 552개의 점포를 운영 중으로 한국형 편의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K-편의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2년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2,600톤의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전국 CU 편의점을 통해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BGF리테일의 해외 진출 성과와 관련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K-편의점 돌풍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널리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김 지사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와 (주)BGF리테일 간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지자체와 기업간의 상생 협력 모델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성공을 거두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생산자 단체인 서재필 고창항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대표에도 "고품질의 고구마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승배 대표이사는 "BGF리테일은 지역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우수 농특산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에도 (주)BGF리테일과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관련 식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물 공급에 대해 협의의 중이어서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도 "시·군 통합해도 기존 혜택 유지·확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도민 설명회에서는 조례안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전주시와 완주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 분야 주요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고 조례제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은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이동기 완주대학교 교수, 민기 전 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남기용 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이수영 지방시대위원회 사무관, 김종필 전북도청 자치행정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 조례 제정 앞서 도민 의견 수렴 위한 설명회 개최

그간 시·군 통합 논의 시, 예산 편성에서 일부 지역이 소외되거나 교육·복지·농업·농촌 등 각종 주민 지원 혜택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출 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안 제3조),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자체 사업 주민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안 제4조) 등을 담고 있다. 시·군이 통합되어도 기존 혜택은 유지·확대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통합에 따른 재정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첫째, 시·군이 통합되면 세금 부담

이 늘어날 것이라는 쟁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다.

두 번째 쟁점은 시군 통합시 주민 1인당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주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중·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존대로 똑같이 지원되고, 자체 사업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지·확대될 수 있어서 이 역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세 번째 보통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는 양 지역의 각종 통계 자료가 합산되어 공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통합이 돼도 한쪽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없어지지 않는다.

넷째, 전주시 채무 상환을 위해 완주군민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채무 상환을 위해 완주군민이 지방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은 없다.

한편, 시·군비로만 편성된 자체 시책 민간 지원사업을 비교했을 때, 인구정책 분야에서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완주군 사업이 돋보였다. 복지 분야의 경우 완주군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전주시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이 우수한 사업으로 주목됐다. 이러한 자체 시책 사업들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혜택은 유지하고 확대된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군이 통합하면 예산 편성 시 일부 지역이 소외되고, 주민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 각종 혜택이 상실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아동학대 없는 전북' ... 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

### 2022년도 이어 최우수 지자체 '영예' ... 아동보호 정책 성과 입증 '아동학대 위기 피해아동 조기지원 사업' 성공적 운영 결과 '호평'

전북자치도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주관의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2022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특히 '아동학대 위기 피해아동 조기지원 사업'의 성공적 운영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은 이러한 아동 보호 정책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민생살리기 시책 사업으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조기 지원하는 '하이 아이'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공모사업 '아동학대 위기 피해아동 조기지원 사업'에 전주, 익산, 남원 등 3개 시군이 선정되어 전북 전역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의 안전망을 갖추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597건으로, 이 중 1,035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4.41%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했다. 이는 전북의 체계적인 신고 및 조기 개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부모(82%)였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북자치도는 방생형 가정 회복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아동과 가해 부모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2023년까지 5개소에서 시행되던 이 사업은 내년 7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전북자치도는 일시보호 시설을 개소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하며,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는 학대피

해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도입하며 민간 중심의 조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조사와 개입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전북에는 46명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의 대응 인력을 갖춘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개입부터 사건 종결까지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7회 이상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익산과 전주에서 대응 인력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이는 대응 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체계적 지원은 현장의 대응력을 한층 향상시키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아동학대 대응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치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한비친구' 해단식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19일 백리향에서 지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한비친구'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원봉사자 해단식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친절과 배려로 총 12개 분야에 배치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한 봉사자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격려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대회 활동영상 시청,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자 소감 발표,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감사패를 전달받은 (주)디솔 황이솔 대표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김영일 본부장은 재능기부와 후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맛과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자원봉사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전북을 알릴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회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는 당부 말을 전했다.

고영호 (사)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해단식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여준 헌신적 활동과 아낌없는 사랑에 감동받았다"며, "한분 한분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산불진화 지상·공중 통합훈련 성료

### 실제 장비·인력 동원한 실전형 훈련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구절초 공원 일원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북동쪽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회와 정읍시가 공동 주관하며, 14개 시군,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불 신고부터 진화 완료까지를 시나리오에 따라 실전처럼 진행해 산불대응의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했다.

훈련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 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됐다. 이후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인력 및 장비 투입이 이루어졌으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 상황판단회의, 언론 브리핑 등을 진행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에는 △산불진화 및 2대 △고성능 진화차 1대 △산불 지휘차 및 진화차 5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개 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개 팀 등 총동원되어,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을철 22건의 산불로 약 7,08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68%가 입산자 실화로 산불감시원 활동 강화와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꾸준한 산불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황상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지원과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력과 지휘체계를 강화했고, 도민 모두가 산불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전 설명 부족"

### 도의회 경산건위, 미진부서 대상 행정사무감사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9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미진부서(송전선로 건설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예산정책협의회 다음날 바로 한전과의 협약을 체결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사업은 사전에 설명이 충분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들을 격정하고 대변해 주는 도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북자치도민들이 송전탑 밑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불안할지 생각해 봤다고 질의하며, 전북자치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꼭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된 송전선로 사업은 상호 간의 소통과 협의가 아니라 통보받고 포집되며, 정부의 뜻에 따라갈 수는 있지만 전북자치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실익이 없으면 전북자치도민의 이익을 생각해 정부 기조에 반대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논리 개발 부족과 소통 미흡을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선관위, 연말 맞아 '아름다운 공약 트리'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사 입구에 '희망 담은 아름다운 공약 트리'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름다운 공약 트리'는 선거홍보관을 방문한 유치원 및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 '안전한 나라,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꿈꾸며 희망을 담아 작성한 공약 카드가 걸려있는 트리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청사 앞마당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